



濁流清論

제13호 2011년 4월 11일(월)

발행인 : 김철환 / 편집 : 편집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lisani@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총장 인터뷰 우리 대학의 비전, 그리고 현안 이슈 및 재단과의 관계에 대하여	1
전문가가 보는 정책 이슈 : 일본지진	11
-내진설계유감(耐震設計遺憾)	11
-일본 지진에 대한 일본인의 자세	13
-원전위기 이후 대학의 에너지교육	14
소식	15
소통과 담론	16

편집위원회 : 구형건(편집책임), 강명구, 김상배, 김혜선, 이재호, 한호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총장 인터뷰 : 우리 대학의 비전, 그리고 현안 이슈 및 재단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 회 : 강명구 (편집위원, 사회과학부)
 배 석 : 이준섭 (총무처장, 법학전문대학원)
 박영동 (교무처장, 자연과학부)
 이재호 (편집위원, 의과대학)

4월호 발간 편집회의의 결과 이번 호 <탁류청론>은 머리 글로 안재환 신임 총장 인터뷰를 심기로 합의를 보았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총장 취임 과정에 대한 교수사회의 대체적 정서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인터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측면 또한 없지 않았다. 소통과 겸손을 강조한 신임총장의 인사말도 인사말이려니와 “안재환호”가 헤쳐 나가야 하는 미해결 현실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었다.

편집위원회는 수 차례의 모임 끝에 질문사항을 정리하였고 이를 문서화하여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총장실에 전달하였다. 본 인터뷰는 (주말을 낀) 나흘 후인 지난 2011년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총장 집무실에서 방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총장실의 제의로 교무와 총무 두 분 처장님이 배석하였고 <탁류청론> 편집진에서는 전 교수회 총무로 일 해주셨던 의과대학 이재호 교수께서 동석해 주셨다. 인터뷰는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고 양해 하에 녹음을 하였다. 본 인터뷰 기사는 이 녹음을 녹취하여 대담 당사자가 직접 살피고 다듬은 것을 재정리한 것이다.

사익자 :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한지 2달 정도 되었는데 한숨 돌릴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교수님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탁류청론 인터뷰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총장 : 제가 전체교수님들과의 대화는 못했지만, 정기적으로 학장님들은 물론이고 학부장 및 주임교수 별로 오찬형식으로 만나고 있으며 자연대학 및 공과대학, 정보통신대, 경영대학, 인문대학은 거의 마쳤습니다. 곧 사회과학대학과 의과대학 주임교수님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전체교수님들과의 만남은 또 한 번 기회가 있겠죠.

대학 운영원칙과 비전에 관하여

사익자 : 새로 취임하셔서 꿈이 크실 텐데요, 첫 번째로 4년간 대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 하는 그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싶은 대학이 있으신지, 있다면 왜 그러신지, 가지고 계신 큰 꿈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총장 : 대학의 사명이라면 크게는 인재양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의 역할 중 하나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대학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익자 : 혹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대학 염두에 두신 것이 있으신지요.

총장 : 저 개인적으로는 2004년, 박재운 총장님 계실 때 대학 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 미국의 교육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약 40개 정도 대학을 정리하면서 ‘노스웨스턴 대학’이 가장 적합한 대학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은 우선 사립대학이라는 점과 전체 학생의 규모가 8,000여명이라는 점이 우리학교와 비슷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은 1985년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고 10여 년 동안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사익자 : 유명한 대학이죠.

총장 : 또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에반스톤에 있기 때문에 우리대학교와 비슷한 지역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제간 교육 및 연구 등 융합학문이 강하며 또한 비즈니스 스킴

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익자 :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하고 유사성이 많습시다.

총장 : 최근에 발전한 대학의 하나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익자 :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면 어떤 걸까요?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규모라던가 사립대학, 지리적 근접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총장 : 지도자라고 봅니다. 총장님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은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익자 : 좋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을 롤 모델의 염두에 두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대학을 만드실 건지 세 가지 부분에서 짚어주신다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의사결정 구조의 측면이 있겠고, 또 다른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인적 자원 확충 문제가 되겠죠. 먼저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를 운영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 하실 것인가 질문 드립니다. 지난번에 아주학보사 인터뷰 하실 때 소통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택하실 것인지, 즉 많이 밀어서 내려 보낼 건지, 아니면 가운데서 집권적으로 여러 견해를 조절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총장 : 대학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가장 큰 자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재정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저를 비롯한 학장·처장님들의 역할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하면서 각자 우리 구성원들의 책무가 강조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은 교육에 헌신하고, 연구에 집중하고, 또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익자 :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지난 서문호 총장님 시절에도 책임 경영제를 도입해서 의사 결정의 분권화를 시도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시장원리를 학교 경영에 도입한 일환으로 보아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호지부지 되고 말았거든요. 본부의 의사결정과 각 단과대학별 의사결정하고, 이 양자 간

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중장 : 소통의 책무라는 게, 총장이나 학장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학의 에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같은 거죠. 지난 일 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리는 것, 그것도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자율 경영이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식으로 정의하는 건 인사와 재정의 권한이 다 들어갔을 때인데, 그게 우리같이 규모가 작고 자원이 한정되었을 때 우리한테 맞느냐는 점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학장님들이 무엇을 일 년 동안 하고 싶은가를 제 앞에서 발표를 간단하게 하시고 연말에는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웃음).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자원을 배분 해드려야겠지요. 그것도 우리 본부가, 총장이 하는 인커리지(encourage) 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외자 : 최근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무엇을 직접 해주기보다는 해주는 힘을 길러 준다는 의미에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 또는 인에이블링(enabl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분권과 집권의 조화를 피력하신 것 같고, 책임을 지게 되면 많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믿고 밀어주실지 학장님들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중장 :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수회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사외자 :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때 아주대가 대외 부총장 제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시행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국제대학원장 할 적에 어떻게 외부 자원 좀 유치할까 해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같은 데 가보면 저만 대학원장이고 다른 대학들은 전부 다 총장님들 오셔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난리입니다. 아주대학교는 병원까지 합쳐서 일 년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과 본부는 회계상 분리되어 있

기는 하지만 재정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자원 조달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큰 그림을 학교 구성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중장 :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비용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절감이란 건, 필요한 곳에는 쓰고, 아끼자는 거지, 안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학교가 의과대학을 빼면 전임교수가 37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직의 종류가 주임교수 및 학과장까지 합하면 200여 개가 됩니다. 제가 교무처장님 하고 기획처장님하고도 많이 상의해서 겹치는 것은 정비를 할 것입니다. 진짜 일하시는 분한테는 많이 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절감에 대해 또 말씀드려보자면, 나 혼자 쓰기에는 이 방이 넓다고 했더니 학교 상징성이 있다면서 만류하더군요. 총장이 되어 일을 해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꽤 있습니다. 제가 방의 조명이 너무 많아 불을 적게 켜는데도 충분히 밝은 거예요. 크게 전기료를 아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선 내부부터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엔 모금 운동을 할 겁니다. 모금 운동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부분인데, 교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대외협력처 산하에 대학발전팀이 있는데, 얼마만큼 실제로 들어오는지 확인해보니, 실망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1-1-1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만원씩 기부하는, 1-1-1운동이 시작 된 지 약 삼 년 되었습니다. 우리 구성원 3000여명 중 74명 정도가 내고 있어요. 거기다 동문도 약 550여명 밖에 안돼요. 1-1-1운동이라는 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전 이게 풀뿌리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6만 명이 1-1-1운동에 참가하면 한 달에 6억이 들어오고, 일 년에 약 70여억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크니까요. 그리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부를 하심으로써 뭐가 좋은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일본재해 때도 그랬지만, 얼마를 기부하시면 당신들한테 어떻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부의 기쁨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학발전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졸업한 미국의 학교 학생들이 전화를 하여 기부를 부탁하더군요. 학생이 전화를 하니깐 얼마라도 내야겠더라고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미국의 주립학교인데 요새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하는 과정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분한테 그만큼 영예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금 확대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기부 요청하는 방법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역할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우리학교의 발전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익자 :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내부 지출 비용을 줄이고 두 번째가 내부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되겠고, 세 번째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인데, 은행장을 만나시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부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리서치 펀드를 더 따온다든가 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중장 : 또 하나가 지자체 관련입니다. 얼마 전 저는 수원 시장을 만나서 경기도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아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문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 대학을 봤더니 펀드의 상당한 부분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입니다. 오는 4월 16일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 때 기부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1-1-1운동을 추천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사익자 : 외부 투자유치 수단으로서 발전기금 축적과 지자체 컨택트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질문을 드리는 측에서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 : 교수님들이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사익자 : 의사결정을 말씀해 주셨고, 재원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그 다음에 사람 문제거든요.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뽑을 것인가, 어떻게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실 것인가. 그것이 결국 대학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장 : 이것부터 말씀드리죠. 실제 입학 관련 정책은 입시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경기도 장학사 출신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했어요. 제가 아주대학교 입학 특보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학교 입학정책을 설명하면서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주대학교가 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어요. 제가 입학 업무를 95년부터 99년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했죠. 그 덕분에 입시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입학도 네트워크가 상당히 작용합니다. 지난번에는 입시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주대학교 입학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입학 처장님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에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이 좋은 건지 등, 다양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는 학생을 우리가 타깃에 맞게 선발해야 해요. 무작정 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대학교에 맞는 학생을 타깃으로 정해놓고 그 학생들을 집중공략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익자 :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 보충질문 드립니다. 아주대학교에 걸맞은 우수학생이 누구나가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성실하다든가, 수능 점수가 높다든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중장 : 저는 학생 모집 전략이 각 단과 대학별로 구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과학대에 어떤 학생이 적합한지, 또는 의과대학에는 어떤 학생이 적합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학별로 다양성을 갖고 해야지, 획일적인 것은 좀 지양하고 싶거든요.

사익자 :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교수충원 문제로 넘어가지요. 학교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수님들을 충원하는 것 쉽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시기 위해 기존의 각 단과대학별 충원 방식을 서서히 본부일괄방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방향은 어떠신지?

중장 : 이것도 역시 재정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교무처장님도 고민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교수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대형과제 연구를 많이 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을 모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강의부담이나 학생지도의 부담을 덜어 드

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외국인 교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교육은 국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외국에서 은퇴하신 한국인 교수님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무처장께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모시고 교원 확보도 다양화하고 학교에 큰 부담이 안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말씀드려 봅니다.

사익자 : 그럴 경우에 기존 전공 하시는 교수 분들의 선택 기준하고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총장 :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전공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죠. 저희들은 지원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길을 많이 만들자는 거죠.

연안 1: 펀드 불법투자 관련

사익자 : 우수교수진 유치는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나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하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관한 조직, 의사결정 문제, 비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많은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안 문제로 넘어가지요. 가장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은 몇 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펀드 불법투자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과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와 있고, 유권해석의 핵심은 대학이 잘못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총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펀드 불법 투자의 기본적인 문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요.

총장 : 실은 이 문제가 2007년, 4년 전에 발생한 건데 우리가 아직도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제대로 고쳐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익자 : 어떤 점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총장 : 제가 아는 바로는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자금 운영 규칙이나 절차의 미비 그리고 다른 학교들의 어떤 관행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타 학교들도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익자 : 일상적인 관행으로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핵심은 실정법상으로 엄연히 유동성 자금과 고정자금인 기금을 분리해서 (즉, 칸막이해서) 그것을 넘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분식회계랄까 아니면 다른 여러 표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불법이라는 말이죠.

총장 : 사실 지적하신 문제들 중 이와 같은 기금의 미분리 운영은 당시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왔고, 펀드투자 등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것이 불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는 이 사건이 발생된 후 알게 되었고 현재는 이를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완전히 고쳤습니다. 당시 아직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인데, 이로부터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서 잘 하도록 총무처장한테 부탁을 하였습니다.

총무처장 :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이들 문제는 총무처 내 관련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자금 운용절차도 투명하게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익자 : 문제는, 서로 선의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거든요. 핵심은 정보 공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의회에 뭐 좀 달라고 하면 계속 안 보여주시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총장 :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면 결국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이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킬 겁니다.

사익자 : 투명성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든지 또는 자꾸 지연돼서 시기를 미룬다든지 그러면 자꾸 의혹이 증폭되거든요. 영수증 문제라던가 회계 처리한 것들 정확하게 밝혀주신다면 그런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내부 해결이 가능한데도 자꾸 밖으로 가져간다고 비난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교수들도 결코 바깥에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학교 위신

이 추락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에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좀 제대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총장 : 2월에 제가 총장취임하면서 교수님들께 약속한 경영 원칙은 계속 지키겠습니다. 교수님들도 의혹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학교를 믿고 신뢰해 주시면 더욱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익자 :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협상을 하다 보면 자주 부각 되는 점이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는 원론이 아니라 디테일에 즉 세부사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구체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자료를 잘 보여주시면 일이 커지기 전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사회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총장 :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같을 겁니다. 저도 학교를 위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니까요.

교무처장 : 제가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AIMS2의 개발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이 좀더 확보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익자 : 공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총장 판공비라던가 그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됩니까? (웃음)

총장 : 판공비 사용 내역도 제가 다 쓰라 그랬어요. 총장 차량의 차량운행일지도 모두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교무회의 회의록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수 의견도 소중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익자 : 펀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훨씬 더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장 :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연안 2: 박종구 전 직무대행 불법임용 문제

사익자 : 또 펀드 문제와 더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가 받은 지시 사항은, 박종구 전 직무대행 불법임용 문제입니다. 잘못은 있지만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정도로 나와 있죠? 교수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도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못 하겠다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교수가 월급 받고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전공이 아닌데 교수를 할 수 있느냐 등의 감정 말입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장 : 이 문제는 교무처장님과 제일 고민하고 계시죠.

교무처장 : 문제가 정확히 법적으로 '불법'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임용 과정에서 절차들이 '절차를 정한 정신'에 합치되지 않게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절차' 자체보다는 '그 배경이 되는 정신'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학교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은 이쯤에서 일단락되길 희망합니다. 학교가 노력을 기울일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내 절차상의 미진한 부분은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익자 :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책임은 당시 임명권자에게 있다 정도로 해석되는데 교과부의 공식 답변은 결국 위의 임용 규칙이 상위 법령의 법령에 저촉 되는 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었습니까? 특별채용 심사기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에서는 통합실시는 할 수 있지만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주대학이 특별채용 규칙으로 갖고 있는 조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었지요. 그래서 1월 13일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해당 학교, 즉 우리 아주대학교는 1월 31일 교무 회의에서 개정을 의결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총장 : 교원신규임용제도에는 크게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채용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4배수의 면접 심사대상자, 그리고 2배수의 임용예정인원을 올리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초심사하고 전공심사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이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익자 : 문제는 전공 심사에 있어 경제학 박사인 박 전 직무대행의 전공이 교육학이나 그리고 면접을 실시했느냐 그런 게 문제 되겠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면접 심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충장 : 심사 위원회에서 면접 심사를 안 했다는 거지요?

사익자 : 박종구 전 차관의 불법 임용 문제에 대한 핵심은 교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절차상 문제 없다. 이렇게 요약하시는 건가요?

교무처장 : 그렇게 요약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장 : 결국은 모든 것이 총장의 인사권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대학교의 교원 채용의 상식,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확대하느냐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현안 3: 연구윤리와 교원인사 문제

사익자 : 박종구 전 직무대행 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구 윤리 문제와 교원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먼저 교원인사 관련입니다. 문제 핵심은 단과 대학의 심사 자율권을 어디까지 본부가 인정해 줄 것인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단과 대학 간의 이견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충장 : 단과대학과 본부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사익자 : 박종구 전 직무대행 시절 일입니다. 어떤 단과대학에서는 피심사자에게 테뉴어(tenure)를 주는 것에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부로 올라와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뒤바꾸려다가 이사회에서 없던 일로 돼버리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과대학 전공에서는 주자고 했는데 학장은 반대하고 중앙인사위에서 다시 뒤바꾸고.

충장 : 이것도 결국은 학문에 대한 존중입니다. 해당 학문에 대한 존중은 각 단과대 또 각 전공의 분들이 결정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 분야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고. 전 기본적으로 그것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익자 : 만약 갈등이 생길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충장 : 과내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익자 : 본부와 각 단과 대학의 의견이 불일치 돼서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장 :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은 심의기관이지만 그것은 아주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공의 적합성이라던가 그 전공의 교수로서의 충분한 자격이라는 것은 단과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과장님, 학부장님, 학장님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대학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과의 관계 1: 총장선임제도 관련

사익자 : 이제 조금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 재단하고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지요.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인사권 문제입니다. 특히 인사권 문제에서 총장 선임제도 확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만하게 해결돼서 대학과 재단이 서로 명분과 실리를 골고루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굳이 반대가 없다면 찬성으로 치는 합의(consensus)를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임기 내에 총장 선임 제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건지요. 교수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더 나아가 교수사회와 어떻게 힘을 합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충장 :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아주대학교에 가장 적합한 총장, 리더를 모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장선임제도도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의견이 접근되었다가 마지막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결국 총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재단이 갖고 있으니 이 점은 인정해야 하고, 좋은 의견 많이 모으면서 저도 교수님들과 많이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훌륭한 총장님을 모시는 것이 저도 아주대학교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가 떠날 때 아주대학교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제도가 마련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재단과도 계속 대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익자 : 제가 보기에는 총장선임 관련해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만 양보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법적 권한이 재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교수사회의 신임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학교가 크게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존중하는 와중에서 교수님들의 충심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수용해 주실 수 있으신지 어떤 식으로 건의를 드릴 것이신지 궁금합니다.

총장 :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익자 : 재단이 어느 정도나 교수사회의 견해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번 총장 선임과정에서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도 무산되었습니다. 재단이 만든 안을 재단에 불리하다고 스스로 안 지키면 도대체 누가 재단의 권위에 힘을 실어 줍니까? 운동경기로 치자면 게임을 하는 중간에 게임의 규칙을 바꾼 겁니다.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없던 걸로 치자.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최소한의 절차적 적법성을 스스로 위반한 겁니다.

총장 :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사익자 : 지금 바뀐 것에 따르면 학장과 처장은 총장님이 제청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직제 규정에는 있지만 정관에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부총장 제청권도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도 없고 직제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에 봉 뜬 상태고요, 두 번째는 보직을 해임할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총장 제청권 문제가 블랭크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보직 제청권은 있지만 보직 해임권한은 재단 이사한테, 이사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모든 문제라는 것은 생긴 다음에 발생하는 거니까요. 대학행정의 총책임자가 일을 하려면 좀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장 : 제가 총장취임 후 이번 보직인사를 할 때 제가 모든 분을 제청하였고 이사회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총장 임명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지지 않았습니다.

사익자 : 부총장 부분에서 총장의 제청권 행사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총장이 지난 번 케이스에서 예민한 부

분이 있었습니다. (직제 규정 문서를 살핀 후) 학장, 처장은 다 있는데 부총장님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블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총장 : (다른 보직자들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사익자 :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총장님의 의사에 반해서 보직자가 해임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기를 저희들은…….

총장 :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잘 협의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재단과의 관계 2: 법정 전입금 미납 문제

사익자 : 다음은 법정 전입금 문제입니다. 재단이 법정 전입금을 120억 정도를 안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일 년치의 50% 쯤 냈고 2010년에 17%, 2011년에 29%를 냈는데 이게 상당히 밀려 있거든요. 2009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 재산이 27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면 한 해 전입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안 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총장 :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한 부분이라 나중에.

총무처장 :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익자 : 저도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됩니다.

지난 일 년 간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익자 : 자꾸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박종구 전 직무대행 시절 직무대행이 여러 가지 매듭을 잘 못 짓고 나간 사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안들이 계속 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번 학생회 간부들한테 박 전 직무대행이 예비비에서 약 2000만 원을 할애해 학생회 임원들 해외여행 경비로 보조해 주었는데 여러 가지 의심이 될 만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아울러서 학생처가 아니라 학생회가 9억 정도 복지장학에 대한 서류지원을 받도록 허용하였고 그 밖에도 학생회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회 선거부터 시작해서 독단과 독선이 많았다고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 캠퍼스의 민주화랄까. 가장 기본적인 데서 학생들이 무너진다면 이걸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 교수님들의 인식입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정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장 : 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장이 되었을 때, 학생회장이 대학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해외대학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관광 유람단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되기 4-5년 전부터 있었던 행사더라고요. 제가 보고서를 다 읽고 대학원생에게 컨퍼런스를 가거나 연구를 해서 발표한다면 지원해주겠지만, 건물보고 오는 건 난 못하겠다고 해서 그걸 없앤 적이 있어요. 원칙에 따라서,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면 해야 하지만, 오해가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¹⁾

사회자 :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처장님도 여기 배석해 계신데, 요새 교수회와 본부 간에 예민한 것 중 하나가 홍보물 게시 관련입니다. 교수회에서 내건 현수막을 총무처에서 마음대로 제거하여 교수님들이 그야말로 경악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홍보물 게시 지침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식의 홍보물 게시 지침을 대학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대학의 올바른 소통이랄까 재단과의 관계에 대한 쓴 소리가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과도하게 억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걸려있는 것이 대학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백보 양보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본부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지 재단의 상임이사가 감나라 배나라 해서 되겠습니까?

총장 : 학교는 다양성이 존재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인터넷도 있고. 현수막도 대학의 홍보 수단이자 하나의 전통이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할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은 그 표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의사표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학의 모습이라는 점은 존중되어야겠지요. 하지만 학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웬만하면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해 주시고 대학 생활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해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총장 : 지금 말씀하신 것 항상 명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아시다시피 총장으로 취임하시기 까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교수의 대부분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안에 기초해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규정을 바꿔가면서 만든 그 절차를 통해서 총장에 취임하신 겁니다. 적잖은 견해가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안고 가셔야 될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소리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 같은 것은 이사장님으로부터 나올지 모르겠지만, 학교 발전의 원동력은 교수 중심으로 하는 구성원으로부터 나오기에 도덕적 뒷받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벗고 교수들과 합심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 제가 2년 전에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의 총장 취임식에 참석했을 때, 총장 선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많은 대학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축사를 하는 등 하나의 축제행사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무척 부러웠습니다. 저희들 모두 계속 노력을 해서 좀 더 발전된 제도로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교수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수님들이 앞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 서로 존중하고 참여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학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사회자 :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총장·거장 : 감사합니다.

1) 편집자 주: 인터뷰 후 총장실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을 요구하였기에 이를 첨부합니다.

“학생회 임원들 해외여행 경비 보조와 복지장학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 한 바로는 지난 2006년부터 총학생회와 학교가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해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장학에 대한 행정업무는 학생처 담당자가 장학기준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해야 하지만, 오해가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당 편집진은 가. 학생회 임원 해외여행 경비 보조는 2009학년도에 중단되었으며 2010학년도 예산 편성 시 배정되지 않았던 사실을 보더라도 이를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으며, 나. 복지장학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은 장학기준에 맞게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장학금의 공식 명칭이 “29대 총학생회 특별복지장학” 이었고 신청서를 총학생회가 받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밝힙니다.

전문가가 보는 정책 이슈

대학은 전문가라는 인재의 집합소이며 양성소다. 그간 대학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면이 할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좀 더 영역을 넓혀 우리의 본령(本領)이랄 수 있는 전문가의 세계로 진출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학내의 각종 정책 이슈들도 다룰 것이다. 대학 정상화와 정책 이슈화라는 양수결장의 첫 번째 포석으로 이번 호는 일본 지진 관련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필설로 형용키 어려운 대 참화를 겪고 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지진을 대비한 내진 설계의 문제를, 정책의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원전 위기와 에너지 교육의 문제를, 그리고 인문학적 입장에서 지진을 대하는 일본 사람의 자세를 해석하는 글 세 꼭지를 신는다. 글을 허락하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많은 동료 전문가들의 옥고를 기대한다.

고료 대신 큰 절 올립니다. 넙죽.



내진설계유감(耐震設計遺憾)

건축학부 김장훈

지난 달 뉴질랜드와 이달 일본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의 소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규모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도 20세기 들어서부터 미국과 함께 세계 내진설계분야를 이끌어 가는 내진설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나라에서 겪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 때문이다. 이 두 사건은 인간이 구축한 문명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이야기만으로, 이웃마을 불구경 하듯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외토픽으로, 간주할 일이 결코 아님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

지진의 발생을 논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가설이 동일과정설(同一過程說)에 근거한 판구조론(plate tectonics)인데, 극히 피상적인 관찰만으로 너무나 엄청난 것을 진실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필자 개인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지만, 지진의 회귀주기(回歸週期 returning period)에 따른 발생빈도(發生頻度)의 분포가 이 이론이 주장하는 판 간의 경계(boundary)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진의 위험도(seismic risk)는 지진의 발생빈도에 따른 확률과 그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풀어 말하자면, 일본이나 뉴질랜드 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 지진의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발생빈도의 확률이 높은 반면, 오랜 세월 동안 지진을 경험하다보니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그러나 지진의 발생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에서는 발생빈도의 확률이 낮은 반면, 지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따라서 이 두 수치의 곱은 일정하게 된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진의 위험도는 세계 어느 곳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다만, 발생빈도에 따라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은 위험하게, 혹은 저 지역은 안전하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왜 지진이 없다는 우리나라에서도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지?”의 물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대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도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지진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약 2000회 가량 있었다고 하니 지리적으로 터를 잘 잡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지진의 회귀주기는 지진의 강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약한 지진은 회귀주기가 매우 짧아 수개월 내지 수년이지만, 강한 지진은 회귀주


기가 매우 길어 수십 년을 넘어 수백 년 내지 수천 년 정도라고 한다. 물론 확률론적인 것이라서 지진이 약속이나 한 듯 회귀주기에 맞추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귀주기 1000년의 지진은 매우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균 1000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지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를 70년이라고 할 때 우리 생애에 1000년 주기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1000분의 70, 즉 0.07, 7%가 된다. 그러한 지진이 올 한 해 동안 발생할 확률은 1000분의 1, 즉 0.001, 0.1%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면, 이런 긴 회귀주기가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즉 인류가 지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여 년 전부터인데 1000년의 회귀주기를 논한다는 것은 100년 동안의 관찰로부터 1000년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칫 무모할 수도 있는 일이다.

여하튼 지진의 발생 자체는 우리 인지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니 이쯤에서 접어두기로 하자. 내진설계는 한마디로 지진에 의한 지반의 변위, 속도 및 가속도가 구조물의 자체 질량에 작용하여 발생한 엄청난 충격과 관성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진의 영향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기획하는 것이다.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하거나 개발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이 작은 지면을 통하여 다 논할 수는 없지만, 힘을 제어하는 방법, 변위를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에너지를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즉 힘을 제어한다는 것은 지진에 의하여 발생할 힘의 크기를 예측하여 그 힘에 견디도록 구조물을 강하게 설계하는 것이고, 변위를 제어한다는 것은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이 일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제어한다는 것은 지진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 하거나 일단 유입된 지진에너지를 구조물이 심각하게 파괴되기 전에 다 소모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전세가 바뀌듯이 설계자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지휘관에 대한 평가는 전쟁의 결과가 말해주듯 내진설계에 대한 평가도 지진이 발생한 후에야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 회귀

주기가 긴 강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설계자 당대에 내려질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하겠다. 이것이 신념과 철학을 갖춘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적절한 실험이 필요한 이유도 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붕괴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생각하게 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게 2차 또는 3차적인 원인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진에 의하여 교량이 손상된 경우를 가정하면, 교량 자체의 복구비용은 일정기간 동안 교량을 통행하여야 할 차량과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설계할 때부터 지진에 의한 손상 및 복구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개의 지진은 가스누출과 이로 인한 화재 그리고 단수를 동반한다. 비구조재(非構造材 non-structural elements)의 붕괴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직접적인 붕괴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병원이나 소방서 및 관청 등 비상시에도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건물들의 피해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는 대개 몇 단계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설계당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향으로 구조물의 손상이 진행 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절대로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변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심각한 지진을 경험한 생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내진설계는 전문가들의 손에만 맡길 성질이 아니다. 의학, 상식이나 주식시세 또는 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의학의 발전, 경영학의 발전, 법학의 발전을 가져왔듯 건축을 부동산 시세만으로 바라보기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내진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내진설계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터전을 위하여 고민하여야 할 그리고 사회와 산업의 모든 분야가 협력하여야 할 사회공학(社會工學 social engineering)이다.


 전문가가 보는 정책 이슈

일본 지진에 대한 일본인의 자세

인문대학 김종식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은 일본 미야기현(宮城県) 센다이(仙台) 동쪽 179km 해역에서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경 발생한 모멘트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였다. 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였다. 3월 11일 하루만에도 95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3월 24일 현재에도 여진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진의 빈도와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은 바다 속에서 일어나, 해안에 해일을 가져온 지진해일(쓰나미)로, 쓰나미는 일본 동북 해안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대부분의 인적·물적 피해는 쓰나미에 의한 것이였다. 여기에 3월 13일 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자력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방사능 물질의 대량 유출과 그에 따른 피폭의 위험이다. 이러한 사고는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3월 11일 쓰나미가 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엄청나게 큰 배가 빌딩의 옥상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정상적인 인간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의 안부를 걱정하지만 늘어나는 것은 주검과 계속되는 여진에 따른 불안 뿐이였다. 당장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쓰나미 피해를 당한 일본 주민은 담담하였다. 피해주민은 서로의 이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무척 놀랐다. 세계의 여타 지진피해지역이 피해 초기에 무법천지화하여 약탈과 무질서가 진행되는데 비해 일본이 너무나 차분하고 빠르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감탄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는 것에 소극적이고, 선진국인 일본에서 피해지역의 주민에게 바로바로 생존에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한편 쓰나미의 영향에 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면서 일본은 공포에 휩싸이고, 일본국민 특히 도쿄지역의 주민이 당황하는 모습에서는 역시 일본사회도 인간사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서의 일본인과 일본사회의 태도에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까지 느끼다가, 쓰나미의 피해에 대한 외부 지원 수용문제와 피해의 응급조치과정에는 의아해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흔히들 일본사회의 특징을 집단주의로 설명한다. 집단주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집단 내부는 강한 결속력을 지니지만, 집단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격을 보인다. 또한 내부 사회는 규율에 따라 위계와 질서를 지닌다. 이것은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는 힘이기도 하다. 쓰나미의 피해에 대하여 일본국민은 자기 영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고 초기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의 응급조치 과정은 규율과 순서에 따라 진행하여 갑갑함을 느낄 정도였다. 오늘날의 일본과 일본사회를 만든 집단주의는 언제나 양날의 칼로 일본에게 다가왔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번 쓰나미에 대응하는 일본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인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방사능사고에는 우왕좌왕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사회가 보편적인 인간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할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원자력 사고는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사고가 잘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원전위기 이후 대학의 에너지교육

에너지시스템학부 최기련

세계는 지금 에너지자원 확보를 넘어 녹색성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에너지수요증가는 지속되지만 그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자연여건의 한계극복과정에서 유발된 이 경쟁은 그 후 산업화시대에서는 전력, 석유정제품, 가스 등 고급-2차 가공 에너지원 확보경쟁으로 변지고, 이제는 자본동원, 기술혁신 관련문제와 연계되어 복잡-다기화 된 사회시스템문제로 진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상사에서 천연자원부존 한계, 오일피크(Oil Peak)이론, 자원민족주의, 지구온난화추세, 원전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들 경쟁상황과 문제점들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즈음 현안인 일본원전사고 원인과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번 원전사고는 다양한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잡한 에너지기술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표출된 것이다. 전력생산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폐열)를 생각하는 데 필요한 전력공급이 단절된 단순한 사고이다. 원전사고가 아니고 냉각사고인 셈이다. 따라서 핵분열, 핵연료처리 등 속칭 첨단기술문제에 정신이 팔려 전력에너지시스템 건전성 유지라는 핵심기본가치를 경시한 업보이기도 하다.

이제 일본 원전사고는 어쨌든 수습될 것이다. 물론 방사능 오염처리, 원전감축, 반핵기조 고조 등 적지 않은 사회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원전사고를 계기로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시스템의 불안정성과 현존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 논란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여기에서 우리 학계로서는 일반사회가 궁금해 하는 인위적 가치교환의 척도인 화폐에 기반을 둔 현행 자본주의 체제를 환경가치 등을 새롭게 반영한 자연자본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녹색성장이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계는 에너지-자원-환경문제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현 세대를 보정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지적자본 축적과정의 혁신과 학문 차세대 육성과정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의 존재이유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제일 먼저 천착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에너지와 자연 그리고 문명 간의 연계체계의 혁신(革新: Innovation)이다. 물론 그간 누적된 연계체계의 비효율성 해소가 가장 시급하고 그 검증대상은 에너지부문이면 더욱 좋다. 여기서 에너지부문의 비효율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존 인류문명은 에너지기술혁신에 근거한 산업혁명에서 유발되었다. 정보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기술 역시 전력에너지산업에서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은 오랜 기간 혁신 동기부족으로 전형적 굴뚝산업으로 전락하였다. 현존 에너지산업은 대부분 200년 전 산업혁명 당시의 “낮은 규모의 경제”추구수준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물질/제품 창출능력과 네트워크 경제에 의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미흡하다. 물론 복합기술의 한계일 수 있으나 에너지의 중요성 때문에 국가권력이 독, 과점을 허용하였고 이 때문에 혁신동기가 부족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보호나 독과점체제 아래 기업들은 혁신동기가 없다. 전형적인 “철 밥통”이었고 X-비효율의 대명사이다. 고달픈 기술혁신과정은 외면하였다. 이것이 에너지위기가 반복되고 기후변화문제가 악화되는 주요 원인이다.

국가자원 적정배분의 원칙에 의하면 “낮은 규모의 경제”만을 강조하는 혁신저해부분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부문은 공공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술혁신을 가속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하다. 정부는 에너지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것도 급진적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급진적 기술혁신은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간과한 무작정 기술개발투자 증대는 자원배분 비효율과 낭비만 조장한다. 이에 에너지인력 부족이 어느 부문보다 심각하다는 정부의 공

공식발표가 있었다.

우리 대학 에너지BK사업은 위와 같은 정부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건 아래 우리 대학이 전문 인력양성을 통하여 궁극적 에너지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향(안)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원칙의 엄격한 시행능력을 갖춘 인력배양.

에너지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만족에서만 나온다. 따라서 종류에 상관없이 효율창출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예컨대 석유이든 석탄이든 가격이 적정하고 편리하면 소비자는 상관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석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산업 구조는 시장과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그 변화에는 오랜 시간과 절차,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다. 수요차별 독점영역 지정관행이 아직 지속되는 셈이다. 따라서 에너지산업 간의 협조를 통한 “혁신”은 미약하고 네트워크 경제효과 창출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러면 결국 소비자/시장의 힘에 의해 퇴출된다. 물론 정부가 과거에는(?) 조정하였지만 이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시스템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주도하는 산업과 시장만이 성공한다. 이런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성경쟁이 우리 대학이 이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잘 기여할 부문이 아닐까?

2) 효율적 학문융합체계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에너지는 원래 복합-융합기술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문과 기술의 융합, 기존 지식체계의 복합, 그리고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능력이 에너지라는 재화의 존재여건이다. 따라서 단위기술보다 시스템기술이 더 중요하다. 이에 현존하는 모든 학문체계의 최고 지식을 에너지시장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융합, 복합하여 새로운 지식/산업/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제는 대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기존 지식전달체계와 상이한 지식혁신체계를 대학이 얼마나 쉽게 수용하고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까?

3) 혁신할 의욕이나 능력이 없는 “인력자원혁신”.

관료화된 조직과 종사자는 근본적 혁신이 불가능하다. 어느 사회나 에너지부문 투자는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자원배분 효율화 차원에서 독과점체제에 익숙한 “혁신저해 인력퇴출”해야 한다. 이에 대학은 에너지부문 차세대 혁신인력 배출 뿐 아니라 기존인력 재교육, 평생교육체계 조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교육과정과 기존 학사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특히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계기는 무엇인가?

문학 감성



늪은 산뱃나무 -송찬호

앞으로 늪은 곰은 동면에서 깨어나도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앓으리라 결심했는기라
동굴에서 밧툰이나 깎으며 뒹굴다가
여생을 마치기로 했는기라

그런데 또 몸이 근질거리는기라
등이며 어깨며 밧긋밧긋해지는기라
문득, 등 비비며 놓던 산뱃나무가 생각나는기라

그때 그게 우리 눈에 딱, 걸렸는기라
서로 가려운 곳 긁어주고 등 비비며 놓다 들킨 것이 부끄러운지
곰은 산뱃나무 뒤로 숨고 산뱃나무는 곰 뒤로 숨어
그 풍경이 산뱃나무인지 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우리는 한동안 산행을 멈추고 바라보았는기라
중동이 썩어 껌인 늪은 산뱃나무가
곰 밧바닥처럼 문득하게 남아 있는 가지에 꽃을 피워
우리 앞에 슬며시 내미는기라

소 식

I. 신입 의장단 및 교수회 대의원회 구성

2011년도 3월부터 신입 교수회 의장단이 구성되었고, 각 단과대학의 교수회 대의원들이 대부분 새롭게 바뀌었다. 보다 효율적인 교수회의 운영을 위하여 5개의 분과를 조직하고 각 대의원들이 분과 별로 소속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의 장: 김철환(사회대)

부의장: 이영돈(의과대)

총 무: 김상배(정통대), 한 호(인문대)

감 사: 박경주(경영대), 이진국(법전원)

운영위원회 조직표

교육분과	김장훈(공과대), 현명선(간호대), 홍민성(공과대), 김대중(의과대), 신영석(공과대)
연구분과	김기홍(자연대), 국경훈(의과대), 김승주(자연대), 박호환(경영대), 최운실(단대미소속)
재정분과	이재호(의과대), 독고윤(경영대), 김진수(의과대), 신승수(의과대), 조성을(인문대)
복지분과	한상돈(법전원), 윤성승(법전원), 예홍진(정통대), 노명우(사회대), 김지은(정통대),
기획분과	강명구(사회대), 김상배(정통대), 한 호(인문대)

III. 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선출

연구년 관계로 공석이 된 두 명의 평의원 선발을 위해 각 단과대에서 투표를 통해 2인을 선발하여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4월 11일에 추천위원회에서 교수 평의원을 선출, 추천할 예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년 전 추천위원회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복잡한 절차를 지양하고 교수회에서 선출하도록 결정하고 통지하였으나, 재단은 교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소모적인 방식을 강행하였다. 다시 한 번 재단에게 무능하고 몰상식한 절차를 단순하고 상식적인 절차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II. 이사장 퇴진 주장 현수막 철거

총무처는 교수회가 3월2일 게시한 이사장 퇴진 주장 현수막을 바로 다음날인 3월3일에 철거하였다. 교수회 의장단과 대의원이 교체되는 시기를 틈타 무단 철거를 한 것이다.

교수회의 요청에 따라 총무처가 제시한 현수막 철거 근거는 2009년 7월 22일에 제정한 “홍보물 게시 및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총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총무처가 정하여 사용해온 내부지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철거의 근거로 제시된 조항은 내부지침의 제 10조 (홍보물 보호) ②항으로서, 그에 따르면 사전 경고 없이 철거하고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홍보물은 게시기간 미명시 홍보물(게시 기간 1주일, 1주일 연장 가능),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물, 승인되지 않은 상업성 홍보물, 대학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비방성 홍보물, 지정 장소 외의 곳에 부착한 홍보물, 과도하게 많이 부착한 홍보물, 게시물의 내용, 규격 등이 면학분위기나 환경미화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홍보물 등이다. 교수회 홍보물의 주 철거 사유는 “대학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비방성 홍보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회 현수막에는 비방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또, 교수회의 철거 현수막 반환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총무처는 현재 이 내부지침을 수정하여 “홍보물 게시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만들었고, 이 안을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다. 교수회는 일단 총무처장에게 이 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홍보물 게시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폐기를 요구하는 원론적인 근거는, 이 지침이 게시물을 내용물 기준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IV.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관련 소식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외 21인의 국회의원이 2월 17일 발의한 사학법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사학의 사기업화를 촉진하는 법안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 시도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본교 교수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회의에서, 사태 추이에 따라, 전체교수가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타 대학과의 연대를 통해 투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한나라 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 전의장 박영무 교수가 경향신문에 글을 기고한 일이 있다. 박 전의장은 개정안을 재단의 전횡을 도와줄 ‘개악’이라고 논하며 비판하였다.

사학법 개정 혹은 그에 대한 비판의 근원에는 “대학은 어떤 면에서 사기업과 다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재단이 사재를 출연하여 대학을 세웠다면 지배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전세계의 선진국을 둘러 보면 우리 나라처럼 설립자 가문들이 대학의 지배권을 휘두르는 나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학들에는 지배가문이 없다.

무엇보다 대학은 교육의 장소이고 교육은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사실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의 설립주체는 재단 법인이자 주식회사가 아니다. 백번 양보하여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전권

을 부여하는 것이 옳을까?

이도 옳지 않다. 현대 경제학의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의하면 법적인 권위(authority)는 실질적인 권위(real authority)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위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재단일까? 교수들일까? 분명 후자이다. 교수들이 대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대리인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가장 줄이는 길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즉 “재단은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10여년 전 있었던 아주대의 원칙이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총장선임과정을 보면서 우리 대학에서 이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보았다. 재단, 그리고, 새로 출범한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께서는 대학은 전문가들이 지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3월 9일 2011학년도 첫 대의원회 회의 모습
새롭게 시작하는 대의원회!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특집 “총장에게 바란다”

탁류청론 14호에서는 특집으로 “총장에게 바란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총장님께 바라는 점을 긴 글, 짧막한 글 관계없이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lisani@ajou.ac.kr